

#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민족주의적 접근과 대응 필요성: 중국의 언론보도(2006~2008) 내용 분석

고 충 석 \*

## 〈목 차〉

- I. 서 론
- II. 동북아의 민족주의와 해양분쟁, 그리고 이어도 문제
- III.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언론 보도
- IV. 이어도에 대한 중국 언론의 민족주의적 대응
- V. 결론에 대신하여: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 I. 서 론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맥을 같이하여 ‘이어도’가 한·중간 분쟁 이슈로 부상할 조짐이 점점 짙어가고 있다. 최근의 중·일간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분쟁에 중국

\* 전 제주대학교 총장, 현 이어도연구회 이사장

은 전례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이 남사군도 등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 과정에서는 수차례의 군사적 대응 등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해 왔지만, 동중국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은 거의 없었다. 시진핑(習近平) 시대 중국의 해양분쟁에 대한 기조 변화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또 2013년 3월 5일 개막한 중국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시진핑 시대 원년의 국방 및 외교 청사진이 공개되었는데, 그 핵심은 강력한 군대 건설과 국방비 10.7% 증액이었다. 분쟁의 열도(intensity)가 계속 고조되는 해양영토분쟁을 염두에 둔 듯하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시진핑 지도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여기에 덧붙여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2012년 시진핑의 국가 주석 취임사에 숨겨진 화두이다. 그는 취임사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언급하면서, 중화민족주의를 통해 국가적 단결을 강조했다.

이러한 최근의 흐름을 볼 때, 중국은 중화민족주의를 통한 국가적 단결과 함께 해양영토분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간에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이어도 이슈가 부각되지 않을 수 없다.

이어도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양경계획정 이슈로 양국간 합의가 필요한 이슈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기초로 한 법리적 근거와 한국 및 제주의 역사와 전통에 기반한 역사적 논거의 발굴과 축적이 중요한 대응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토주권의 문제는 역사적·법리적 근거와 논리를 통한 합리적 논쟁을 넘어서 종종 국민감정의 대결로 치닫는 경우가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중·일간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분쟁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해양영토 분쟁이 민족주의와 결합될 경우, 정부 간의 성명 논쟁, 일반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 해상 대치, 경제제재, 교류협력 제한 등과 같은 외교관계 전반에서의 악화를 가져왔던 전례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역사적 권위이나 법리적 근거, 논리적 토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쟁론을 무색케 한다.

영유권이나 관할권을 둘러싼 해양분쟁에서 민족주의는 변수(variable)가 아니라 상수(constant)라고 할 만큼 분쟁 당사자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핵심적 영향요인이 되고 있다. 민족주의의 추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시민의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사용의 증가로 국민적 동원과 단체행동이 과거보다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되었다.<sup>1)</sup> 또 민족주의적 대결과 공방이 기존의 시위 중심에서 인터

넷을 통한 담론 경쟁과 자극적 언술의 대결로 나아가게 되면서 국가간 외교관계에 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큰 파급력을 보이고 있다.<sup>2)</sup>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동북아의 민족주의 환경을 고려할 때, 이어도 이슈가 민족주의적 대결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연구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족주의와 연계된 이어도 이슈에 대한 논의는 언론의 우려 섞인 보도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어도 논쟁이 민족주의의 개입으로 첨예한 분쟁 이슈가 될 경우 어떻게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할 것인가? 이 글은 이어도 이슈에 대해 중국이 민족주의적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에 대비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영토분쟁의 동인으로서 민족주의의 특징을 일별하고 이어도 문제의 성격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언론 보도(2006~2008년)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어도 관련 보도 경향과 주요 내용, 그리고 특히 이어도 이슈에 대한 민족주의적 대응을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이어도 이슈에 대한 중국의 민족주의적 접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글을 맺을 것이다.

## II. 동북아의 민족주의와 해양분쟁, 그리고 이어도 문제

### 1. 영토분쟁과 민족주의

세계화 이후 동북아에서 각국의 민족주의는 갈수록 고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역사 문제나 영토분쟁이 민족주의와 결합되면서 이슈의 본질적 측면을 넘어 국민감정의 대결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특정 이슈를 둘러싸고 국민감정이 격돌할 경우, 그 민족주의는 종종 배타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보이게 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실제로, 2012년 9월 일본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로 촉발된 중·일간 영유권 분쟁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의 실효적

1) Manuel Castells, *Communication Power*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2) Xu Wu, *Chinese Cyber Nationalism: Evolution,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ing Groups-Lexington Books, 2007).

지배를 강고히 하고자 하는 일본과 이를 타파하고자 하는 중국의 강경 대응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도 전망하게 하고 있다.

영유권이나 관할권과 같은 해양영토 문제는 영토주권과 국익, 대외적 위신까지 걸린 문제이니만큼 민족주의를 촉발하여 사활을 건 공방을 벌이는 뜨거운 이슈가 되곤 한다. 독도 문제나 역사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중·일 3국은 역사나 해양영토 분쟁에 관한 한 ‘트라이앵글 구조’(triangle structure)로 얽히고설킨 채 있는 것이다. 트라이앵글 구조의 기저에 3국의 민족주의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역사문제나 영토문제와 결합되면서 국가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영토분쟁과 결합되는 민족주의는 그 어떤 민족주의적 발현보다도 심각한 여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많은 연구들도 영토분쟁과 민족주의의 결합을 지적하고 있다. 자원개발의 문제라든가 정치적 이익과 관련된 영토분쟁은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이익의 배분을 통해 타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족주의가 개입된 영토분쟁은 타협이 난망해지게 된다. “민족주의는 이익의 문제를 원칙의 문제로 전환시키고, 사람들은 원칙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sup>3)</sup>”을 뿐만 아니라 국민감정까지 개입됨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영토분쟁을 다룬 여러 경험적 연구들이 ‘민족주의’ 요소를 분쟁 강도 및 해결 등에서 중요한 변수로 고려해 왔다.<sup>4)</sup> 여기에 반영되는 민족주의적 요소들로는 주로 인종·종족의 관련성이 정체성 또는 식민지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또 ‘국내의 반대’와 ‘국민적 감정’ 등 민족주의 요소도 영토분쟁의 국가간 평화적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심지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영토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영토분쟁이 고질화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가 국민적 감정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3) 최운도·배진수, “민족주의와 영토분쟁: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 한국학술원. 『동아시아 민족주의와 영토분쟁: 합의와 전망』, 제13차 코리아 포럼 자료집(2011. 4. 8), p. 9.

4) 최운도·배진수, “민족주의와 영토분쟁: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 p. 10 재인용.

〈표 1〉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토분쟁

분쟁 사례	종족 갈등	최근 폭력	역사적 적대감	취약한 정부	제3자 개입	고유치 (eigenvalue)
버마-태국	0.252	0.274	<b>0.547</b>	0.333	0.091	0.2533
중국-인도	0.527	0.125	<b>0.547</b>	0.333	0.038	0.2542
중국-일본-대만(센카쿠열도)	0.252	0.125	<b>0.547</b>	0.097	0.091	0.1837
중국-한국(해양)	0.252	0.125	<b>0.547</b>	0.097	0.091	0.1837
중국-베트남(통킹만)	0.252	0.125	<b>0.547</b>	0.097	0.091	0.1837
인도-파키스탄(카슈미르)	0.252	0.274	<b>0.547</b>	0.333	0.038	0.3124
일본-러시아(쿠릴열도)	0.527	0.125	<b>0.547</b>	0.097	0.091	0.2544
한국-일본(독도)	0.252	0.125	<b>0.547</b>	0.097	0.091	0.1837
남사군도	0.527	0.125	<b>0.547</b>	0.097	0.038	0.2427
캄보디아-태국(해양)	0.252	0.274	0.241	0.333	0.091	0.2281
중국-북한	0.252	0.038	0.162	0.333	0.091	0.1293
인도-네팔	0.252	0.038	0.050	0.333	0.091	0.1201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시파단)	0.252	0.125	0.050	0.333	0.091	0.1541
말레이시아-태국(해양)	0.527	0.125	0.241	0.097	0.091	0.2291
필리핀-대만(해양)	0.527	0.125	0.050	0.097	0.091	0.2134

출처: Dzurek(1999-2000, 93)의 연구에서 아시아 부문 발췌.

주목할 만한 기존 연구 중의 하나가 두쥬렉(Daniel J. Dzurek)의 연구이다.<sup>5)</sup> 그는 세계의 42개 영토분쟁 사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토분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계층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으로 분석했다.<sup>6)</sup> 〈표 1〉은 아시아 지역의 영토분쟁 사례들만 추출한 것이다. 민족주의 요소, 특히 역사적 적대감(historic animosity) 항목은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심각성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중국이 분쟁 당사국으로 개입된 사례들은 거의가 역사적 적대감의 요소가 작용하고 있으며, 그 수준도 비교적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한국과 중국 간의 해양분쟁의 경우도 역사적 적대감의 요소가 가장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

5) Daniel J. Dzurek, "What Makes Some Boundary Disputes Important?" *IBRU Boundary and Security Bulletin* (Winter 1999-2000).

6) 이 연구에서는 갈등의 수준을 매우 높음(AHP Eigenvalue: 0.547), 약간 높음(AHP Eigenvalue: 0.241), 보통(AHP Eigenvalue: 0.162), 낮음(AHP Eigenvalue: 0.050) 등 네 개의 계층으로 구분한다.

과 같은 기존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볼 때, 영토분쟁에 미치는 민족주의의 영향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갈등의 요소로서, 특히 분쟁의 심각성을 높일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격화되고 있는 중·일간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분쟁이나 한·일간 독도 문제와 달리, 중·일 간에 도서영유권 분쟁은 없다. 그러나 해양경계획정 이슈로서 이어도 문제가 있다. 도서영유권 분쟁과 해양 관할권 분쟁은 서로 그 본질과 여파가 차이를 보이지만, 이어도 문제도 해양영토 분쟁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에 동기 부여되어 분쟁화할 수 있는 이슈이다. 이어도 문제가 아직까지 심각한 분쟁 이슈로 부상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의도 여하에 따라 분쟁화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 2. 이어도 문제의 본질

이어도는 오래 전부터 제주도에서 이상향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 속의 섬(島)이었다. 1900년 영국 상선 소코트라(Socotra)호가 암초에 걸려 좌초한 해상사고를 계기로 이어도는 ‘소코트라 암초’(Socotra Rock)로 해도 상에 명명되었다. 이어도는 기준 수면에서 4.6m 아래 있는 수중 암초이며, 수심 40m를 기준으로 할 때 남북으로 약 600m, 동서로 약 750m에 이른다. 이어도는 중국의 동단 통타오(童島)로부터 247km 떨어져 있지만 사실상 이 섬은 무인도이기 때문에 ‘서산다오(余山島)’라는 유인도를 기점으로 삼으면 287km 떨어진 곳에 이어도가 있다. 또 일본의 도리시마(鳥島)로부터는 서쪽으로 276km 떨어져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마라도로부터 서남쪽으로 149km 떨어져 있어 한국과 가장 가깝다.

그런데 문제는 이어도가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이어도는 한·중 간 해양 관할권 분쟁의 잠재적 이슈로 등장했다. 그 시발은 1995년 태풍·해일 등 해양 및 기상 현상의 연구 및 예보에 활용하기 위한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된 이후이다. 중국은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 운영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어도 관련 중국 NGO가 결성되어 한국 정부의 해양과학기지 운영에 대해 반대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도 주변수역 해저에서 발견된 또 다른 암초에 대해 자국어 명칭인 ‘쑤옌자오’(蘇岩礁)를 붙이는 등 이어도 및 그 주변수역의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어도는 한·중·일 3국에 의해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가운데 해역에 있는 암초로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과학적·군사안보적으로도 중요한 지점이다. 이어도는 북상하는 쿠로시오 해류와 남하하는 황해의 한류, 중국 대륙의 연안수가 만나는 지점으로 다양한 어종이 풍부하게 서식하는 동중국해의 대형 어장이다.<sup>7)</sup> 주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이어도 주변수역은 해양환경 및 기상관측 등 해양과학 조사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난구조와 어업지원을 위한 기지를 설치할 수 있는 적지로 평가된다. 또한 이어도는 동중국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군함의 통과 항로 및 주요 군사 활동을 위한 수역에 해당되는 등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sup>8)</sup>

이어도 문제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이어도의 위치와 가치에서 배태되는 것이지만, 이를 해석·인식하는 준거가 무엇이고 관할권 확보를 위해 어떤 접근을 할 것인가 등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한·중 간 이어도에 대한 상이한 인식과 접근을 객관적 시각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이어도 문제는 아직까지 국가가 공식적으로 갈등의 핵심 주제로 등장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한·중 양국 정부는 모두 이어도 이슈에 대해 당사자간 협상 이슈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sup>9)</sup> 중국이 주장하는 EEZ 획정 원칙인 역사적 권위이나 한국이 주장하는 중간선은 양국 정부의 기본 입장인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상대국 정부에 대해 이를 공식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중 양국의 학계가 각자의 원칙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이에 민간 부문이 동조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도 문제가 국가간 본격적인 갈등 이슈로 부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현재로서 심각한 갈등 이슈로 현재화되었다기보다는 잠재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최근의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분쟁을 전후로 한 2011년 말 이후부터 중국이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에 대한 통제를 본격화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sup>10)</sup>

7) 노홍길, "Socotra 암초 주변해역의 수산학적 특성," 『해양정책연구』, 제6권 제2호(1991), pp. 475-492.

8) 심재철·박광순·이동영,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방안 분석," 『해양정책연구』, 제11권 제2호(1996), pp. 408-413.

9)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1. 9~11) 때,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한·중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한·중] 양측은 양국 간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양국관계의 장기적, 안정적 발전과 해양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인식하고, 해양경계획정 관련 협상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세계일보』, 2012년 1월 10일자; 『Newsis』, 2012년 1월 10일자.

10) 2011년 12월 14일과 15일 서해상에 중국해감(中國海監) 50호와 66호를 배치하고 조어도 일대와 춘샤오 일대, 한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어도와 가거초 일대를 순항하겠다고 대대적으로 공포한

중국 민족주의의 발흥이 이어도 이슈로까지 확장될 경우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분쟁과 같은 심각한 수준으로 이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이어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EEZ 문제, 즉 해양경계획정 이슈이기 때문에 갈등 주체 간의 양립불가능한 이슈는 아니다. 주지하듯이, 이어도는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양법적으로 경계획정의 결정적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국가간 합의와 협상을 통해 이어도 주변수역의 해양경계가 획정될 수 있다. 이어도 이슈가 양립불가능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데는 협상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기 위한 전략적 조치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국가 존립의 토대인 영토를 둘러싼 분쟁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지면서 마치 합의와 타협이 영토주권의 포기로 인식되면서 양립불가능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중의 민족주의가 개입되면서 EEZ 획정을 통한 해양 관할권 문제가 영유권 문제로 와전되어 보다 더 강도 높은 갈등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갈등의 침체화에는 기본적으로 상대국의 의도에 대한 불신과 같은 인식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1)</sup>

셋째, EEZ 분쟁이 본질적으로 국가간 경제적 이익갈등으로 이해되듯이, 이어도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EEZ가 어떻게 획정되느냐에 따라 해양 관할의 범위가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해양 자원의 활용 범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어도 이슈는 이처럼 순수하게 경제적 이익갈등으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이나 한국 모두에게 이어도 주변수역은 주요 해양 수송로가 통과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에너지는 단순히 경제발전의 동력이라는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의 문제로 인식되지 오래다. 또 이어도 이슈는 군사적 측면에서도 가볍지 않은 이슈이다. 이어도가 위치한 동중국해는 중국의 제1도련선 범위 내에 있으며, 중·일간은 물론 미·중간 해양패권이 점점 더 격화되는 상황에서 EEZ를 확대하는 것은 이러한 해양안보의 이해와도 관련된다. 본래 EEZ 자체는 군사적 이슈가 아니지만 해양에서의 중·일 또는 미·중간 과도한 경쟁이 야기될 경우, EEZ는 해역 방어의 지렛대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안보협력도 경제적 이익갈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군사적 문제와 같이 국가의 생존에

바 있다. 또 2012년 1월 말에는 'Y-12' 쌍발엔진 터보프롭 장거리 정찰기까지 추가 배치했다. 정찰기의 순시활동 범위는 중국 연안에서 200해리로 앞서 언급한 분쟁지역을 모두 포함한다. 『環球時報』, 2012년 1월 6일.

11) 이남주·배기찬, “동아시아공동체 추진과 민족주의 극복방안,”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p. 438.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포지티브섬 게임으로 전환하기 어렵다<sup>12)</sup>는 점에서 갈등해결이 쉽지 않은 이슈이다.

마지막으로, 갈등이 발생하여 점점 더 고조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사안의 성격에 따라 쉽게 짧은 기간에 해결되지 못하는 사안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온 경우일 것이다. 특히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슈들인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이런 이슈들조차도 근본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이슈는 아니다. 유럽 통합이 이를 잘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유럽은 크고 작은 숱한 전쟁들을 치렀으며, 한·일 관계와 유사하게 영국과 프랑스도 숙명적 관계로 비쳐지곤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통합되고 자국의 주권 일부를 공동체에 이양할 수 있었다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갈등도 해결 또는 치유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 크게 제약하는 요소가 민족주의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크다. 특히 국가적 정체성의 확립이 한·중·일 3국 모두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고, 종종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이 정치적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민족주의를 활용함으로써 그런 가능성을 더욱 제약하고 있다.

### Ⅲ.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언론 보도

#### 1. 중국 언론의 이어도 관련 보도 경향

중국 내에서 이어도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슈였다. 2003년 이어도 해양과학 기지가 준공된 직후에도 별다른 보도가 없었다. 중국 언론의 이어도 관련 보도는 2006년경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이어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시기와 비슷하다. 2005년 중국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다섯 차례나 감시 비행했고, 또 중국 국가해양국이 2005년 「해양행정집법공보(海洋行政執法公報)」를 발표하면서 이어도에 대한 중국 언론의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중국의 이어도 관련 활동과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국내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 2006년 9월 13일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들이 2005년 「해양행정집법공보」

12) 이남주·백기찬(2009), p. 438.

내용에 근거하여 중국 해감(中國海監)이 이어도 해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인 사실을 보도했다. 중국 측에서도 9월 14일 중국 외교부 친짱 대변인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후 중국의 언론 보도는 종래의 경우와 양과 질 양면에서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예컨대, “한국이 우리나라(중국) 동해의 수엔자오를 침략 점거하다. 중국 영해 주권의 수호는 잠시라도 늦출 수 없다”, “중국은 수엔자오에서의 한국의 해양관 측활동을 반대한다”, “한국 8년의 시간을 들여 플랫폼 건설, 중국 동해의 수중 암초인 수엔자오를 강탈하려 하다”는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각종 논문 및 기고문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소위 “수엔자오”에 대한 중국 측의 권원 주장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중국 언론의 이어도 관련 보도는 2006년 9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기자회견 직후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부터 중국 측 언론의 이어도 관련 보도는 기존의 보도된 내용을 이따금 전제하는 형태에 불과했다. 아울러 그 또한 양적인 면에서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중국 언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국의 이어도 관련 보도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주의적 정서를 촉발하는 격정적 보도도 중국 정부와의 교감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간혹 중국 정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한국의 이어도 관련 활동과 언론보도에 대한 비판이 중심 내용이었다. 또 여러 언론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외부교의 공식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뒤에서 보다 상세히 검토하겠지만, 수엔자오보위협회(保衛蘇岩礁協會)를 조직화한 왕쩌엔싱(王建興)의 선동적 주장에 대한 보도도 잠시 동안 반짝 기사로 다루어졌을 뿐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자취를 감췄다.

따라서 2006~2008년까지 중국 언론의 적극적인 이어도 관련 보도는 중국 정부와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후 관련 보도가 줄어들게 된 것도 역시 중국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9월 이후 일본과의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분쟁이 격화되면서는 이어도 주변 수역, 즉 동중국해에 대한 순시활동 강화 등의 보도는 있었지만 이어도와 관련된 쟁점이 될 만한 기사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역시 일본과의 분쟁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서 전선을 한국과 일본으로 확대하지 않으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로 보인다.

## 2. 이어도에 대한 보도의 주요 내용

중국 언론들의 이어도 관련 보도는 내용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이어도, 즉 중국명 ‘쑤옌자오’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는 것과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주장 비판과 한국의 관련 조치에 대한 우려와 의혹이다.

우선,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 주장은 ‘역사적 권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거들이 제시되어 왔다. 첫째는 이어도 주변 수역을 중국의 전통수역이라고 주장한다. 즉 쑤옌자오는 자고이래로 중국의 영토이며, 이어도가 위치한 중국의 동해를 서방 국가들이 동중국해(East China Sea)라고 칭하는 이유도 그곳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전통수역이었음을 입증한다는 주장이다.<sup>13)</sup> 둘째는 한국의 이어도 인식보다 중국의 쑤옌자오 인식이 100년 앞선다는 주장이다. 중국 측은 1880년에서 1890까지 쑤옌자오의 위치는 청조 북양수사(北洋水師)의 해도에 명확하게 표기되었는데 반해, 한국은 1984년 제주대학교와 KBS방송국으로 구성된 연합탐사대가 이어도를 탐사하고 나서야 처음 그 존재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쑤옌자오 부근 해역은 중국의 산둥, 강소, 절강, 복건, 대만 등지 어민들이 활동한 어장이며, 근대 이래로 (일본과 한국을 포함하여) 어떤 국가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sup>14)</sup> 세 번째로는 1963년 중국의 원양화물선인 ‘약진호(躍進號)’가 쑤옌 해역에서 암초에 부딪쳐 침몰했을 때 당시 국무원총리이던 저우언라이(周恩來)의 지시 하에 중국해군 동해함대와 교통부 측량대대가 쑤옌자오에 대해 정밀 측량과 정밀 해도 작성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영해주권을 선포했다는 주장이다.<sup>15)</sup> 이처럼 중국의 역사적 권원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EEZ 내에 위치한 쑤옌자오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 것은 중국의 주권을 침범하는 행위라는 것이다.<sup>16)</sup>

다음으로,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관련 주장들을 반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여러 언론들이 가장 광범위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한국의 해양경계 획정 원칙에 대한 비밀관성 문제이다. 해양경계획정 문제에서 중국은 대륙붕 자연연장 원칙에 따라 일본 및 한국과 경계를 획정할 것을 주장하며, 일본은 ‘중간선’ 원칙을 주장하는 데 반해, 한국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원칙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즉 제주도 이남에 대해서는 자연연장을 요구하고, 서쪽으로는 중간선원칙을 요구한다. 한국은 1970년대에 일본과 해저 영토의 획정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대륙붕 자연연장설 원칙을 주장했으나 중국과 해저 영토문제를 처리할 때는 오히려 이 원

13) “韩国八年搭平台 欲争中国东海苏岩礁,” 『人民網』, 2006年 9月 19日.

14) “韩国了解苏岩礁比中国晚一百年,” 『新快報』, 2006年 11月 25日.

15) 『亞洲周刊』, 2006年 12月 3日.

16) “韩国八年搭平台 欲争中国东海苏岩礁,” 『人民網』, 2006年 9月 19日.

칙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의 이러한 태도는 중국의 대륙붕이 한반도와 가까운 지역까지 뻗어 있기 때문에 자연연장설의 원칙으로 대륙붕의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17)</sup>

또 중국은 마라도와 이어도 관련 활동에 대해 비판할 뿐만 아니라 해양과학기지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첫째는 한국 정부가 1978년 마라도에 “대한민국 최남단”이라는 비석을 세워 마라도가 한국 최남단의 섬임을 표명했고, 과거에 출판된 각종 지리 서적에도 마라도가 한국 최남단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어도를 한국 최남단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주장이다.<sup>18)</sup> 둘째는 한국 내에서의 이어도 관련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1995년 이후 한국은 이어도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했는데, 2001년 1월에 한국국립지리원과 중앙지명위원회에서 기존 명칭이었던 ‘파랑도’를 ‘이어도’로 개명했고, 최근 학계에서는 이어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어도학”을 정립했다고 보도했다. 또 “대한민국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리 이어도”라는 우편주소를 부여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sup>19)</sup> 세 번째로는 해양과학기지를 “한국의 수엔자오 섬 만들기”로 보면서, 해상 플랫폼을 건설·유지하는 데에 거액을 아끼지 않아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고 보도했다.<sup>20)</sup>

한편, 중국 언론들은 한국이 이어도에 관한 민족주의 정서를 동원하며 기획적 언론보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은 오랫동안 이어도 문제에 대해 행동만 할뿐 언급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관련 보도를 하지 않다가 2006년 9월 중순부터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감시활동에 대해 중국이 한국의 영토를 강탈하려는 의도라는 내용의 집중적인 보도를 대량으로 했고, 각종 증거로 암초가 분명한 이어도를 한국 최남단의 도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는 것이다.<sup>21)</sup> 특히 이어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한국 국내의 극단적 민족주의 정서와 한(恨)의 정서를 선동하여 한국 사회에서 이어도 주권의 수호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sup>22)</sup>

17) “韩国加入抢油大军 钻机伸向黄海大陆架,” 『新華網』, 2004年 7月 15日; “韩国八年搭平台 欲争中国东海苏岩礁,” 『大華網』, 2006年 9月 19日; “中国海洋安全存在三大问题,” 『國際先驅導報』, 2006年 10月 25日; “釣魚島中國海路咽喉,” 『文匯報』, 2006年 11月 30日; 『亞洲周刊』, 2006年 12月 3日; “分歧犹存 韩媒关注中韩海上专属经济区划界,” 『新華網』, 2006年 12月 7日.

18) “中国海洋安全存在三大问题,” 『國際先驅導報』, 2006年 10月 25日; 『亞洲周刊』, 2006年 12月 3日.

19) 『亞洲周刊』, 2006年 12月 3日.

20) “中国海洋安全存在三大问题,” 『國際先驅導報』, 2006年 10月 25日.

21) “韩国空军打造新战机‘鹰巢’ 打压朝鲜提防中国,” 『東北新聞網』, 2006年 12月 3日.

이와 같은 중국 언론의 이어도 관련 보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어도에 대한 자국 관할권 주장과 한국의 이어도 관련 인식과 행동에 관한 비판 등에 그치지 않고, 자국 국민들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보도를 하고 있다.

#### IV. 이어도에 대한 중국 언론의 민족주의적 대응

이어도 이슈에 대한 중국 언론의 보도에서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자극적인 언론보도 제목이다. 예컨대, “한국, 우리 동해 ‘쑤옌자오 침략 점거, 영해주권 보호는 느슨하게 할 수 없어”,<sup>23)</sup> “중국 동해 쑤옌자오의 한국 강탈”,<sup>24)</sup> “도서의 피 침략 점거 상황 매우 심각”,<sup>25)</sup> “한국 쑤옌자오 점거, 중 한 팽팽한 긴장”,<sup>26)</sup> “쑤옌자오: 한국에 잠식당하는 중국의 푸른 국토”<sup>27)</sup> 등이 주요 사례이다. 이들 제목만 보면 한국이 이어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의 고유 영토를 침략하여 강탈한 상태이며,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 양국은 심각한 대립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도 중국의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많다. 예컨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일을 꾸며 점점 대중의 시야에 들어가게” 했으며, 이러한 한국의 이어도 쟁탈행위가 한·중간 해양경계 확정문제를 쟁점화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관련 보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은 EEZ에 대해 주권을 보이는 행동을 자제했으나 주변국가는 그 통제를 적극 강화하여 “중국의 해양권익이 이웃 국가에 잠식당”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국가해양국의 중국 해양에 대한 순시와 관리 강화를 정당화하고 있다.<sup>28)</sup> 아울러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중국의 쑤옌자오에 대한 주권 영유의 꺾임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이러한 행위를 모방하여 또 쑤옌자오 부근 해역 수중의 “땡옌자오”에 한국식 명칭을 부여했다고 보

22) “中国海洋安全存在三大问题,” 『國際先驅導報』, 2006年 10月 25日.

23) 『人民網』, 2006年 9月 19日.

24) 『重慶晨報』, 2006年 9月 20日.

25) 『國際先驅導報』, 2006年 10月 25日.

26) 『亞洲周刊』, 2006年 12月 3日.

27) 『軍事文摘』 3期, 2007年 5月.

28) “韩国八年搭平台 欲争中国东海苏岩礁,” 『大華網』, 2006年 9月 19日.

도하고 있다.<sup>29)</sup>

또 해양경계획정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건설을 ‘침략적 점거’로 규정하며 비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한국의 이어도 관련 활동을 “중국 동해에 마수를 뻗치”는 것으로, 그리고 “암초(쑤옌자오)를 조준하”여 이를 이취화시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 측은 이어도를 침략, 점거하기 위한 ‘합리적 핑계’를 찾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 날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로 쑤옌자오를 ‘이어도’라 명명한 점, 쑤옌자오에 주소를 부여한 점,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해 진상을 왜곡한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sup>30)</sup>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건설에 대해서도 중국 언론들을 감정적 선동을 알삼는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로 해양경계 문제를 민감한 사안으로 다루기 시작한 중국 언론들은 기지 완공 이전부터 주변 해역 점거의 속셈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sup>31)</sup> 여기서 더 나아가 르샹자오(가거초의 중국명)와 중국 강소 해안선 사이에 중간선을 그어 황해 60% 이상의 해역을 점거하려 한다면서 “그 탐욕이 동중국해에서의 일본보다 훨씬 크다”고 비난한다. 중국의 한 언론은 한국을 다음과 같은 기사를 통해 영토 확장에 혈안이 된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sup>32)</sup>

북으로는 ‘장백산’ 사건과 ‘간도 문제’, 연변과 천지의 남한 귀속 요구, 동으로는 죽도(독도) 점령으로 상당부분의 일본해를 탈취하고 국제사회에서 ‘동해’ 또는 ‘한국해’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반도 남부 해구는 제주를 교두보로 삼아 중국 동해 쑤옌자오를 점거하며, ... 반도 서쪽으로 “르샹자오”(가거초)를 점거하여 ... 60-50%의 황해 수역을 차지하려는 야심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국제해양법을 참조해도 그들의 그 유치하고 간단한 왜곡이론, 즉 ‘죽도(독도)는 울릉도와 가깝고, 오키시마(隱岐島)에서 멀기 때문에 응당 우리 측에 속한다’, ‘쑤옌자오는 제주도가 중국 저우산의 퉁다오보다 가깝기 때문에 한국에 속한다’, ‘르샹자오는 소혹산도에 가깝고 중국의 무인 사주에서 멀기 때문에 한국에 속한다....’는 등의 유치한 주장을 언제나 따라 줄 수 없는 것이다.

중국 언론들은 이처럼 이어도 문제를 그 자체에 국한시키지 않고 한국의 동·서·남부 해역에서의 적극적인 해양주권 확보 활동을 매도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과의 독도 문제나 동해 표기 문제까지 연계시켜 한국의 영토 확장 야심을 경계해

29) “年终盘点东海问题：中国克制彰显大智慧,” 『中國經濟網』, 2006年 12月 22日.

30) “蘇岩礁：正在被韓國“蠶食”的中國“藍色國土,” 『軍事文摘』 3期, 2007年 5月.

31) 『亞洲周刊』, 2007年 4月 29日.

32) “南韓欲在我黃海日向礁興建基地,” 『鼎盛軍事』, 2009年 2月 28日.

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제주도의회의 ‘이어도의 날’ 조례안 관련 해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중국 언론들은 1월 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하여 국내외에 이어도를 선전하고 일방적으로 한·중 EEZ의 중첩 주장 지역을 한국의 영토로 바꾸려는 의도라며 여러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비난에 나섰다.<sup>33)</sup>

이처럼 이어도 문제가 이슈화 되던 초기에 『아주주간(亞洲周刊)』 2006년 12월 3일자에서는 이어도 문제에 대해 대대적으로 다뤘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의 불법성과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의 도서”라는 한국의 언론 보도, 한국 내에서의 이어도 관련 활동 등 비판하는 한편, 한국보다 100년 앞서 해도에 수엔자오를 표기했다면서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권원을 강조하는 기사를 실었다.<sup>34)</sup> 이외에도 약진호 침몰 사건 직후 이루어진 수엔자오 해역의 전면적 측량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도 소개했다.<sup>35)</sup> 더욱이 수엔자오보위협회를 추진중인 중국사회과학원 박사반 왕찌엔싱의 이어도와 관련된 NGO 결성 활동의 배경과 동기,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아울러 중국이 수엔자오에 주권을 갖는 이유, 한국이 수엔자오를 점령한 의도, 중국 정부가 수엔자오 이슈에 대해 저자세를 보이는 이유, 그리고 현 상태로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결과 등 수엔자오에 대한 그의 생각과 주장을 묻는 심층 인터뷰까지 실었다.<sup>36)</sup>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왕찌엔싱의 프로 필까지 기사화<sup>37)</sup>함으로써 수엔자오 주권 확보를 위한 전위대의 투사로 그를 보도했다.

또 『아주주간(亞洲周刊)』 2007년 4월 29일자에서는 현재 중국 인터넷 상에 수엔자오 명예 주민이 35명 있으며, ‘수엔 권역을 지키자’(扞衛蘇岩圈, 新浪博客圈)와 ‘바이두(百度)蘇岩礁吧’라는 웹사이트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원자바오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수엔자오 명예 주민 1인이 ‘중화민족의 한국에 대한 36개 질문’을 발표하였고 수백 명 네티즌이 이를 전재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두망(網)의 ‘르샹자오(日向礁)吧’에는 중국의 네티즌들이 ‘르샹자오는 한국 최서단 소흑산도와 다소 가깝고, 중국이 바다를 소홀히 하여 관심을 적게 가짐으로 인해서 한국이 여기에 해상 플랫폼과 인공 섬을 건설하여 전 해역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국

33) “中国測量蘇岩礁大事記,” 『新快報』, 2007年 8月 9日; “国濟州道通過例案設立“離於島日”与中国爭海礁,” 『環球時報』, 2008年 6月 27日; “韩国欲爭奪中国海礁主權,” 『環球時報』, 2008年 6月 28日; “設“離於島日”, 建所謂科研基地, 韓國欲爭奪中國蘇岩礁,” 『佛山日報』, 2008年 6月 28日.

34) 『亞洲周刊』, 2006年 12月 3日.

35) 『亞洲周刊』, 2006年 12月 3日.

36) 『亞洲周刊』, 2006年 12月 3日.

37) 『亞洲周刊』, 2006年 12月 3日.

민으로서 이를 막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sup>38)</sup> 이어도 문제를 인터넷 상의 이슈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한편, 중국 언론들 중에는 강경 일변도보다 협력적 관점에서 이어도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 언론은 중국내 유명한 해양법 전문가 겸 중국 국가해양국 전 부국장, 국가해양국 해양전략연구소 고급 공공사 허삼안의 이어도 문제에 대한 주장을 다루었다. 여기서 허삼안은 한·중·일간 동해 분쟁은 도서 및 암초의 주권 쟁의, 해양의 천연가스와 어업자원 쟁탈, 해역 경계 획정 쟁의와 민족 감정 등 여러 가지 측면에 관련되어 있어 해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쟁의를 멈추고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분쟁 해결과 해양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했다.<sup>39)</sup> 덧붙여 그는 한·중 간의 해양경계획정 협상은 중·일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한·중이 모두 자연연장 원칙을 견지한다면 양국은 같은 전선에 서게 되어 대일 담판에서 일치된 원칙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이는 쌍방의 대일 담판에 유리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sup>40)</sup>

그러나 이러한 협상 가능성에 대한 주장에 대해 왕찌엔싱은 그 자체가 중국의 주권을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반대했다. 왕찌엔싱은 한국의 이어도 관련 활동을 중국 영토주권 보전의 침범이라고 주장했다.<sup>41)</sup> 특히 군산의 공군기지를 중국과의 영해 분쟁을 대비한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sup>42)</sup>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어도 이슈를 계기로 국방력 증강을 통해 중국의 해양권익을 유지 보호할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주창하기도 했다. 해양발언권에 있어서 중국은 미국 일본과 비교해서 여전히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서방의 일부 국가들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자국의 안전을 유지 보호하는 차원일 뿐 패권을 장악할 의도는 결코 없다고 했다.<sup>43)</sup> 이어도 문제로 일부 중국 언론들은 중국내 해양영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국민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sup>44)</sup>

38) 『亚洲周刊』, 2007年 4月 29日.

39) “釣魚島中國海路咽喉,” 『文匯報』, 2006年 11月 30日.

40) “釣魚島中國海路咽喉,” 『文匯報』, 2006年 11月 30日.

41) 『亚洲周刊』, 2007年 4月 29日.

42) “韩国空军打造新战机“鹰巢” 打压朝鲜提防中国,” 『東北新聞網』, 2006年 12月 3日.

43) “釣魚島中國海路咽喉,” 『文匯報』, 2006年 11月 30日.

44) “海洋国土多争议 中国需加强全民海权教育,” 『环球网』, 2009年 3月 3日.

## V. 결론에 대신하여: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현대 중국의 민족주의는 1990년대 애국주의로 시작된 이래 관계 동원된 국가 주도 민족주의만이 아니라 자발적인 대중적 민족주의도 병존하고 있다. 공자학원의 세계적 전파와 같이 중국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의 위대성을 과시하는 문화민족주의도 전파되고 있다. 5억 명이 넘는 인터넷 인구의 잠재력을 이용한 ‘사이버 민족주의’도 무시하지 못할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 주목해야 할 문제는 중국의 민족주의가 대외관계용으로서의 활용된다는 점일 것이다. 1999년 나토군의 유고 주재 중국 대사관 폭격(오폭)에 따른 반미시위, 2000년 후반에서 2001년 초반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로 인한 반일민족주의, 2001년 4월 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의 충돌에 따른 반미 민족주의, 2005년 일본의 유엔 안보리 진출 문제 및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로 인한 반일시위, 2008년 3월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과정에서의 민족주의 표출, 2010년 이후 일본과의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분쟁의 격화로 인한 민족주의 표출 등에서 보듯이, 1990년대 말 이후 대외 갈등이나 영토분쟁은 중국내 민족주의 시위와 짝을 이루어 전개되고 있다.<sup>45)</sup>

이러한 중국의 민족주의 시위도 중국의 부상과 함께 진화하고 있다. 대체로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민족주의 시위가 발생하면 공세적 외교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초기에는 정부가 방관하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뒤에는 시위를 해산·저지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른바 ‘초기 방관-후기 개입’ 패턴이 그것이다.<sup>46)</sup> 2000년대 중반 이후 들어서는 ‘평화적 발전’(和平發展)이나 ‘조화세계’(和諧世界) 등을 내걸며 눈치 보던 기존의 민족주의에서 훨씬 더 대담하고 공세적인 민족주의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단초가 바로 2000년대 들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華民族的偉大復興)’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민족’과 ‘중화민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sup>47)</sup> 이는 정부 차원에서 중화민족주의를

45) 중국의 민족주의와 영토분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는 고충석·강병철, 『이어도 해양분쟁과 중국 민족주의』(서울: 한국학술정보, 2013)을 참조.

46) 이우준, “중국 정부의 민족주의 운용방식에 관한 연구: 1999년 반미시위 및 2005년 반일시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6), p. 4; 이남주·배기찬(2009), p. 421; 한석희, “21세기 중국 민족주의의 딜레마: 세계화와 실용주의적 민족주의의 상호관계,” 『신아세아』, 17권 1호(2010), p. 95.

47) 1997년 제 15차 당대회에서 처음 공산당의 공식문건에 ‘중화민족의 부흥’이 등장한 이래로 장쩌

대내외에 공식 표명하고 고취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진핑이 취임사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언급한 것도 중화민족주의의 적극적인 대외적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와 같이 중국 언론들을 통해 제기된 이어도에 관한 문제와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들을 살펴보면, 이어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민족주의적 접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다. 중국 정부 및 주요 관료, 그리고 민간단체가 공식·비공식적으로 이어도의 관할권에 대해 표명한 입장들은 다양하다. 이러한 주장들에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근거로 비교적 온건한 시각에서 이어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어도 과학기지 활동에 대해 항의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동북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느 영토갈등들과 마찬가지로 민족주의적 정서를 동원한 감정적 주장이나 극단적인 도발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특히 근거가 부족한 역사적 논리를 동원하여 예로부터 중국이 이어도를 관할했다는 주장이나 이어도 과학기지 건설을 중국의 영토주권 침범이라는 강변이 그것이다. 이외에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문제로 이어도와 관련된 중국 홍가(紅歌)가 400만 네티즌들의 지지 하에 최우수 홍가로 선정되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sup>48)</sup>

쑤옌자오(이어도)가 뻗어나간 화하(중화문명)  
 적미서(大正島, 센카쿠열도의 다이쇼지마)에 꿈이 걸려있고  
 경도선과 위도선이 비파 현 같구나  
 한국을 연주함이 하늘 끝과 함께하여  
 다표위다오(센카쿠 열도)에 동백이 가득 피었네  
 송이송이 아름다운 꽃들이 서사(서사군도)에 피고  
 일찍이 정원사가 가호하였으니  
 진한당송 길이길이 전해 내려왔다. ...

요컨대, 해양영토분쟁이 항상 객관적인 사료와 근거 및 국제법을 기초로 합리적인 협상과 타협에 의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영토분쟁은 국내외의 다양

민은 2001년 공산당 창당 80주년 창당 기념식 연설에서 ‘민족’과 ‘중화민족’이라는 단어를 각각 33회, 10회나 반복했다. 그리고 2002년 11월 제16차 당 대회에서도 장쩌민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보고의 서두와 말미를 장식하면서 9차례나 반복했다. 후진타오 체제 하의 2007년 10월 제17차 당 대회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동률, “중국 민족주의 고조의 대외관계 및 한 중관계 영향,” 『중소연구』, 제35권 제4호(2011/2012), p. 44.

48) 고충석·강병철, “오카노도리시마 분쟁이 이어도 이슈에 주는 시사점,” 『이어도연구』, 3호(2012), p. 32.

한 요인들과 결부되어 가시화되기도 하고 잠재화되기도 한다. 영토분쟁은 영토 획득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의 민족주의적 흐름에 편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이어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논리적 근거와 주장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응태세의 확립과 함께, 민족주의적 동원 전략에 기반한 중국의 이어도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사실, 그동안의 이어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은 대부분 법리적 측면에서 UNCLOS에 대한 해석과 새로운 논리와 주장의 발굴에 집중되어 왔다. 예를 들면, 이어도 문제가 국제분쟁화 할 경우에 대비한 국제법적 대비, 다른 국가들의 영토분쟁 관련 국제법적 사례 분석, 중국 영토분쟁의 역사적 기원과 진행과정 소개, 한·중 양국의 이어도 관련 역사적 권원 증거 수집 등에 치중되어 왔다.<sup>49)</sup> 이러한 연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작업이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는 분야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이에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을 주장하기 위한 역사적·법리적인 근거와 논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UNCLOS와 국제해양법재판소 같은 국제규범과 사법기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영토분쟁에서는 종종 국민정서와 힘의 논리가 관철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국제법적 접근만으로 중국과의 이어도 분쟁에 대비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 민족주의에 동기 부여된 중국 민간단체가 이에도종합해양과학기지에 상륙하여 시위하거나 고의적으로 충돌을 일으키는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최근의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분쟁에서 보듯이, 중화민족주의의 대외적 발현으로 공세적인 해양영토분쟁이 지속·강화될 경우에는 중국과 군사적 대결이라는 극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도는 센카쿠/다오위다오 분쟁에 이은 중국의 다음 타깃이 될지도 모른다. 이 때 중국 민족주의는 이에도에 대한 중국의 야욕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할 것이다. 물론 이에도 분쟁의 신호탄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이에도 관할권 주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주장이 공세적 행동으로 연결될 것인지를 예측, 판단할 수 있는 척도는 ‘점거’, ‘강탈’, ‘영토 잠식’과 같은 중국 관영언론의 이에도에 대한 자극적인 민족주의적 보도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한층 대담하고 공세적으로 진화하는 중국 민족주의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49) 이에도에 관한 연구 경향에 대해서는 (사)이에도연구회 홈페이지의 『이에도연구』(국문판)와 *Jeodo Journal*(영문판)을 참조할 것.

## 참고문헌

- 고충석·강병철, “오키노도리시마 분쟁이 이어도 이슈에 주는 시사점,” 『이어도연구』, 3호 (2012).
- 고충석·강병철, 『이어도 해양분쟁과 중국 민족주의』, 서울: 한국학술정보, 2013.
- 노홍길, “Socotra 암초 주변해역의 수산학적 특성,” 『해양정책연구』, 제6권 제2호(1991).
- 심재설·박광순·이동영,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방안 분석,” 『해양정책연구』, 제11권 제2호(1996).
- 이남주·배기찬, “동아시아공동체 추진과 민족주의 극복방안,”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 이동률, “중국 민족주의 고조의 대외관계 및 한 중관계 영향,” 『중소연구』, 제35권 제4호 (2011/2012).
- 이우준, “중국 정부의 민족주의 운용방식에 관한 연구: 1999년 반미시위 및 2005년 반일시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6).
- 최운도·배진수, “민족주의와 영토분쟁: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 한국학술원, 『동아시아 민족주의와 영토분쟁: 합의와 전망』, 제13차 코리아 포럼 자료집(2011. 4. 8).
- 한석희, “21세기 중국 민족주의의 딜레마: 세계화와 실용주의적 민족주의의 상호관계,” 『신아세아』, 17권 1호(2010).
- 『세계일보』, 2012년 1월 10일자.
- 『Newsis』, 2012년 1월 10일자.
- “設“離於島日”, 建所謂科研基地, 韓國欲爭奪中國蘇岩礁,” 『佛山日報』, 2008年 6月 28日.
- “南韩欲在我黄海日向礁兴建基地,” 『鼎盛军事』, 2009年 2月 28日.
- “年终盘点东海问题: 中国克制彰显大智慧,” 『中國經濟網』, 2006年 12月 22日.
- “分歧犹存 韩媒关注中韩海上专属经济区划界,” 『新華網』, 2006年 12月 7日.
- “蘇岩礁: 正在被韓國“蠶食”的中國“藍色國土,” 『軍事文摘』 3期, 2007年 5月.
- “釣魚島中國海路咽喉,” 『文匯報』, 2006年 11月 30日.
- “中国海洋安全存在三大问题,” 『國際先驅導報』, 2006年 10月 25日.
- “中国測量苏岩礁大事记,” 『新快報』, 2007年 8月 9日.
- “国济州道通过例案设立“離於島日”与中国争海礁,” 『環球時報』, 2008年 6月 27日.
- “海洋国土多争议 中国需加强全民海权教育,” 『环球网』, 2009年 3月 3日.
- “韩国加入抢油大军 钻机伸向黄海大陆架,” 『新華網』, 2004年 7月 15日.
- “韩国空军打造新战机“鷹巢” 打压朝鲜提防中国,” 『東北新聞網』, 2006年 12月 3日.
- “韩国了解苏岩礁比中国晚一百年,” 『新快報』, 2006年 11月 25日.
- “韩国欲争夺中国海礁主权,” 『環球時報』, 2008年 6月 28日.

“韩国八年搭平台 欲争中国东海苏岩礁,” 『大華網』, 2006年 9月 19日.

『國際先驅導報』, 2006年 10月 25日.

『軍事文摘』 3期, 2007年 5月.

『亞洲周刊』, 2006年 12月 3日.

『人民網』, 2006年 9月 19日.

『重慶晨報』, 2006年 9月 20日.

『亞洲周刊』, 2007年 4月 29日.

『環球時報』, 2012年 1月 6日.

Castells, Manuel, *Communication Power*,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Dzurek, Daniel J., “What Makes Some Boundary Disputes Important?” *IBRU Boundary and Security Bulletin* (Winter 1999–2000).

Wu, Xu, *Chinese Cyber Nationalism: Evolution,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ing Groups–Lexington Books, 2007.

Abstract

**The Necessity of Countermeasure Against  
China's Nationalism Approaches to Ieodo:  
Analysis of China's Media Contents of Ieodo(2006~2008)**

Koh Choong-Suk\*

Korea, China, and Japan forms triangle structure which mixed complicatedly on the history and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Nationalism lies on the basis of triangle structure, and it is a main factor which increase tension and conflicts among three countries. Considering dynamics of changing nationalism circumstance, Ieodo issue needs to prepare active countermeasures which considers cope with nationalism confrontations. The aim of this article is suggests preparations of active countermeasures cope with nationalism provocative actions. First, I will specify nationalism as a factor of territorial dispute, and review characters of Ieodo issue. Second, I will analyse China's nationalism to Ieodo through analysis of China's media contents and coverage trend of Ieodo issue (2006~2008). I will suggest necessity of active defense measures coup with China's nationalism, basis of these analysis. As a result, China's nationalism might be a criterion which measures of China's desire for Ieodo. Stimulating Ieodo coverage of China's state media can be a criterion which predicts China governments's for Jurisdiction of Ieodo. We need active measures coup with China's nationalism Which evolves into a much more bold and assertive.

Key words: Ieodo,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jurisdiction of maritime territory, China's nationalism, China's media, content analysis.

---

\* President, Society of Ieodo Research